

#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정책의 개선방향

## I. 서론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에는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일반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와 농업, 공업, 상업 등 분야의 전문교과를 담당하는 교사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초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일반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를 제외한, 전문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근래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업고의 위기 문제와 실업교원 정책문제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업교원에 대한 정책 문제는 실업고가 당면한 위기에 대한 대응책과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실업고가 당면한 위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3학생과 그 학부모 대다수가 실업고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인문고와 실업고의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또는 얼마나 오래 유지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그 뒤에 오는 실업교원에 대한 정책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보화, 지식화로 치칭되는 지금이야말로 하나의 문명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변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실업고 체제를 다시 검토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양성-임용-보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김 재 식

서원대  
무역학과 교수

## II. 실업계 고등학교 체제의 변화 방향

### 가. 실업고에 대한 인식의 재평가

직업을 얻거나 최초로 얻은 일을 잘 해내는데 특정한 교과목이 도움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눈앞의 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고도의 교육투자 효과를 측정하는 척도로는 적당치 않다. 현실적인 성과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너무 비싸다. 진보한 사회에서 교육의 실용성을 시험하려면, 학교를 졸업한지 15년 정도 지난 후에도 그 교육이 과연 일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아야 한다(Drucker, 1959). 상업고등학교를 예로 들면, 1985년에 그렇게도 열심히 가르쳤던 [주산], [베이직],

[DOS], [상업서예]는 지금도 일의 현장에서 유용한 능력인가? [타자]란 과목명은 사라졌지만, 타자능력(키보딩능력)은 상고 졸업생에게만 필요하던 능력에서 현대인 모두에게 필요한 기초 능력의 하나가 되었다.

현재의 우리 교육시스템의 여러 문제점 중에 하나는 개개인의 능력에 대한 선별이 너무 빠른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인문고와 실업고, 인문고 내에서는 인문, 자연, 예체능으로, 실업고에서는 다시 농고, 공고, 상고 등으로 나누어진다. 과거에는 이러한 선별이 유용했는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지식기반 사회에서도 고등학교에서의 공부를 차별화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 볼 필요가 있다. 편중된 과목만을 공부하는 것은 장래의 가능성을 너무 일찍 닫아 버리는 것이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흔히, '무분별한' 또는 '맹목적인' 진학풍조라고 말한다. 정말 그런가? 그들도 자신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보다 현명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적 투자(학력)와 보상은 상당한 비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다. 상업교육을 비롯한 직업교육의 생존을 위해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보다는 기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 수요자들이 실업고라고 하는 제도를 통한 직업교육은 원하지 않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직업적 능력이나 태도를 개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요구가 존재하는 한 실업교육에도 충분한 기회는 있다. 문제는 이것을 찾아서 실현하는 방법이다.

## 나 실업고 구조의 변화

직업교육의 중심역할을 해 온 실업고는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특성화되어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자발적인 선택을 받는 실업고는 생존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가 마지못해서 오고, 와서도 대다수가 진학을 희망하고, 실제로 상당수가 진학을 하는 실업고는 존재가치를 잃어 갈 것이다. 통합형 고등학교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변화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이다.

TV가 등장하면서 라디오 방송은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라디오 방송은 그 나름대로 영역이 살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에 비해 그 영역이 매우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도 인기 있던 저녁시간의 라디오 연속극을 지금 누가 듣는가? 절대적 가치로 보면, 라디오방송은 아직도 중요하다. 그러나, 절대량으로 보면 그 비중은 매우 약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중등학교 직업교육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이 변화를 누가 거스를 수 있겠는가? 사람은 변화를 관리할 수 없다. 사람은 오직 변화를 앞서갈 수 있을 뿐이다(Drucker, 1999). 그러나, 그 동안 실업교육에 관계해 온 우리들은 변화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보낸 결과, 많은 영역을 잃어 왔다. Drucker(1999)는 조직적 폐기가 필요한 분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던져 보라고 권한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그 전부터 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알게 된 이것을 새로 시작할 것 같은가?"

앞으로 실업고 중에 일부는 일반학교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일부 학교는 지금보다도 더 좋은

경쟁 위치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반학교로 운영하는 것보다 몇 배의 노력과 투자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확고한 목표의식을 가진 실업고는 이러한 학교로 남게 될 것이다.

실업고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많지 않다. 첫째는 특성화를 통한 실업고 체제의 유지이다. 여기에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단지 학교의 이름을 특별하게 작명하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용이 좋아서 입학경쟁이 일어날 정도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일반학교로 과감하게 전환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기존의 실업교사의 권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가능할 것이다. 통합형 고등학교는 이러한 충격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아직 통합형 고등학교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아서, 앞으로 이것이 실업계 고등학교 체제에 미칠 파장을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다. 이미 강원도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고등학교 체제의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즉, 인문계 고교 선호로 매년 입학생이 줄고 있는 강원도내 2개 실업계 고교가 대학에서처럼 학생들이 듣고 싶은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전공코스제를 2000학년도부터 처음으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영월공고가 2000년부터 현행 학과제를 폐지하고 신입생을 선발해서, 기계와 전기전자 등 기초분야의 과목을 들은 뒤 대학생처럼 관심있는 분야의 수업을 골라 듣는 전공코스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한다(한국일보, 1999). 전공코스는 컴퓨터그래픽과 멀티인터넷, 승강기 보수, 자동제어 등 모두 15개과정으로 취

업 전망이 밝거나 요즘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첨단분야다. 특히 전공코스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3학년 때 제과제빵 코스를 운영해 취업을 도울 계획이며,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과정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외에 삼척 근덕농공고도 삼척전자공고로 명칭을 바꾸고 전공코스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Ⅲ. 실업계 고등학교 교원정책의 방향

#### 가. 양성

학령인구의 감소와 실업고 기피현상의 심화에 따라, 머지 않아 실업고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을 기초로 하는 경우 실업교원에 대한 양성정책은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양적인 측면에서의 수급균형에 그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실업교원의 양성은 사범계와 교직과정, 그리고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지속되어 온 사범계 축소 정책에 따라 농업, 공업, 상업 모두 사범대학에서 양성되는 인원은 매우 적은 편이다. 농업교육과는 서울대, 순천대, 건국대에, 공업계 교육과는 충남대와 안동대에, 상업교육은 공주대, 전남대, 제주대에 개설되어 있다. 교직과정 또한 기존에 교직과정인가 인원을 30%에서 10%로 일괄 축소해서, 내년부터는 급격하게 공급이 축소될 전망이다. 신규로 교직과정을 인가해 주는 것도 억제하고 하고 있어서 더 이상 공급이 늘어날 전망은 없다. 교육대학원을 통해서도 교원자격

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열려 있기는 하지만, 교육대학원은 대부분 현직 교사의 재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신규공급 기능은 미미하다. 실업교사에 대한 양적 측면에서의 조절은 큰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자격증 표시의 정비 문제이다. 교육부에서는 현재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서,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농업과 공업분야는 표시과목이 종전에 비해 상당히 통합되거나, 조정되었다(표1 참조). 상업은 상업정보로 자격증 표시를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농업 및 공업분야의 자격증을 큰 영역 중심으로 통합한 것은 적절한 정책선택으로 평가된다. 또한, 상업을 상업정보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된다. 7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상고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학교에 컴퓨터 교육이 도입되었다. 이때 컴퓨터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상업교사이다. 그런데, 상업교사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사이에 전자계산이라는 자격증이 교원

자격 검령상에 표시과목으로 추가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고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던 상업교사는 상치교사라는 라벨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 라벨을 떼기 위해 전자계산 부전공 연수를 받거나, 교육대학원 전자계산교육 전공으로 진학을 하는 어려움과 추가적인 부담을 감수

해야 했다. 이제 상업을상업정보로 변경하게 되면 현직상업교사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업교사에 대한 신규수요 창출에 이것이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컴퓨터 교과를 담당할 신규교사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그 동안에 해 온 관행에 따라, [상업정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전자계산(앞으로는 [정보·컴퓨터]) 표시를 가진 사람을 선호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즉, [상업정보]자격과 [정보·컴퓨터]자격간에 영역 구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과거 일부에서 상업자격을 농업이나 공업처럼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일이 있다. 그러나, 세분되어 있던 농업이나 공업 분야에서는 통합

[표1] 교사자격증 중 통합 표시과목

통합 표시과목	변경 표시과목
농업, 공업, 전기, 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전자,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The content of this table is extremely faint and illegible in the provided image.)

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재 당면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실업교사의 자격증 표시가 통합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세제, 질적 관리의 문제이다. 적절한 인원의 실업교원을 공급하는 것과 함께, 우수한 능력을 지닌 실업교원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우수한 실업교원의 양성은 실업 분야의 사범계 학과에서 우수한 신입생을 확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달려 있다. IMF를 계기로 근래에 우수한 학생들이 사범계를 많이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범계 학과 중에서 실업 분야의 사범계 학과 신입생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우려되는 일이다. 신입생의 지원율은 졸업후 임용가능성과 깊은 상관성이 있다. 그동안 실업 분야는 공업을 제외하고는 임용기회가 거의 없었다. 다행히, 2000학년도를 비롯해서 당분간은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의 급증으로 인해서 신규교사에 대한 임용율이 다소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나. 임 용

2000학년도에는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의 급증으로 인해서 실업분야도 신규교사에 대한 임용인원이 예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실업교원에 대한 신규임용 비중이 높은 경남, 전남 등 대부분 지역내에 소재한 실업교가 극심한 미달 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실업고 체제를 기준으로 계산된 교사 수요에 따

라 신규로 실업교사를 대량 임용하는 것은 머지 않아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정년단축이 있기 전에 이미,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서 실업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과원교사의 해결을 위해 부전공 연수 등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실업교사를 대량으로 신규임용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2000학년 공립학교 임용고시에서 모집하는 인원만 하더라도, 농업계 89명, 공업계 204명, 상업계 161명(전자계산 132명 포함) 등 총 454명이나 된다. 향후 1-2년은 문제가 없겠지만, 실업고 체제가 급속하게 무너지는 경우, 이들 과원교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정책결정을 해야 할 문제이다. 흔히 과원교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전공 연수를 통한 일반교과 자격증 부여 방법은 교사자신을 위해서나 학생들을 위해서나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다. 최선의 방법은 그러한 일을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급조절을 하는 것이다.

현재의 실업체제 내에서 정년단축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교원에 대한 신규수요는 실업교과 단위의 감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실업고의 경우 일반교과 단위에 비해 실업 전문교과 단위의 비중이 너무 높다. 물론 일선학교 운영자 입장에서는 교육과정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라가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45% 이상이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실업계 학교에서 전문교과의 비중을 높게 잡고 있는 것은 학습자의 요구와도 거리가 먼 것이다. 이러한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는 교육정책당국에서 실업고의 일반교

과와 전문교과간의 편성비율을 학교장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 다. 보상

45%이상이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상화에서 중3학생과 그들의 학부모에게 고등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돌려주어야 할 시점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선진국의 추세를 통해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는 인문고 대 실업고의 비율이 80 대 20 내외에서 자연적인 균형을 이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살아남는 실업고는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 학교들일 것이다. 거기에서 전문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때쯤 되면 자연적으로 이들 실업교사에 대한 처우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실업교사에 대한 처우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상업교사에게만 실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이다. 실과수당의 법적 근거는 산업교육진흥법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산업교육진흥법에서 실과교사의 수당지급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와 차이점은 이 조항에 근거해서, 다시 실과교사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특별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점은 일본도 이 특별법에서 상업교사는 실과수당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은 농업, 공업, 상업이라고 하는 전통적 방식에 의한 분류는 큰 의미가 없다. 농고에서도 농산물 유통을 가르치고, 상고에서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각종 정보처리 내지 정보통신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 상업교사의 수가 많아서 예산상 어려움 때문에 실과수

당을 당장은 지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업교원 정책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IV. 결론

실업교원 문제는 실업고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다. 따라서, 실업교원에 대한 정책방향도 실업고에 대한 정책방향이 먼저 정해지고 나서, 그러한 틀 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업고에 대한 정책방향은 국가 산업인력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적 시각보다는 산업정책 차원에서 큰 방향이 결정되어 온 경향도 없지 않다. 산업정책 목적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실제로 실업교육을 받는 학생의 복지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면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짧은 기간동안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사회, 나아가 지식 기반사회로 이행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실업계 고등학교와 관련한 교육정책의 구조는 70-80년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산업사회의 요구에 순응하기 위한 체제로 대부분 그냥 남아 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지식사회가 틀림없지만, 우리 산업구조는 아직 산업사회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될 수요자들의 생각과 실업고 구조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직업교과를 담당하는 실업교원은 다른 교과의 교사에 비하면, 직업적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들은 자기 전공분야의 직업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앞으로는 어떤 직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직업적 이동은 불가피한 현실로 수용해야만 할 것이다. 산업사회의 변화와 교육수요자의 인식 변화를 감안할 때, 현재의 실업고 체제를 무리하게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 부작용은 점점 더 커질 수도 있다.

### 참고문헌

김재식(1997). 상업교육의 변화추세에 관한 연구. 상교논총, 제13집.  
 \_\_\_\_\_, (1998). 교육수요자의 상고교육에 대한 태도 연구. 상교논총, 제16집.  
 \_\_\_\_\_, (1999). 상업교육 분야의 변화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 상업교육학회 1999년 하계 학술발표논문집.  
 동아일보(1999). 실업계 진학 비관 중학생 아파트서 투신자살. 동 신문 1999/11/16.  
 이재규 역(1999). 21세기 지식경영. 한국경제신문사.  
 한국일보(1999). [강원] 2개 실업고 전공코스제'

운영. 동 신문 1999/11/11  
 Church O.D.(1989). Why teach business? Business Education Forum, April 1989.  
 Drucker, P.F.(1959). The landmarks of tomorrow.  
 \_\_\_\_\_, P.F.(1989). New realities. Harper & Row.  
 \_\_\_\_\_, P.F.(1999). Management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NY: Harper Colins Publishers.  
 Inman T.H.(1988). The future's impact on business education. Business Education Forum, November 1988.  
 Lutjeharms J. E.(1986). Assessing the future of vocational education. Business Education Forum, January 1986.